

FIP-2015-0011 (통권 제221호, 2015. 12)

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

ISSUE
PAPER

Contents

I . 검토배경	1
II . 최근 가계소득 변동 추이('04년~'14년)	2
III . 가계소득 변동 원인에 대한 항목별 검토	4
IV . 가계소득 개선 방향	8
V . 시사점	11
[참고] 가계소득 항목 구성 및 정의	12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, 박예지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오영경 조사역 TEL : 02-3771-0445 FAX : 02-6234-5394 E-mail : naya319@fki.or.kr
박예지 연구원 TEL : 02-3771-0151 FAX : 02-6234-5385 E-mail : pyj706@fki.or.kr

● ● ● 요약 ● ● 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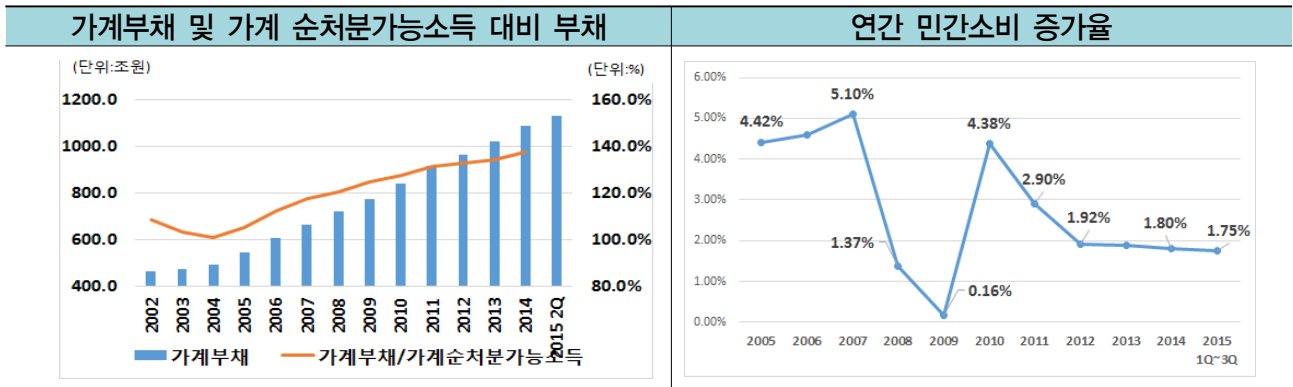
- [검토배경] 가계소득 증가율, '11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4%대로 둔화
 - '90년대 명목GDP, 가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.4%, 11.4%로 두 자리대 성장, '00년대에는 연 7.1%, 5.8%로 하락, '11년부터 연평균 명목GDP 증가율 4.1%의 낮은 수준 지속으로 가계소득 증가율도 연 4.6%로 한 층 둔화
 - 가계소득에 초점을 맞춰 가계소득 항목별로 증감 원인을 파악 및 향후 과제 제시
- [현황] '04년~'14년 가계소득은 연 4.9%씩 증가, 피용자보수가 빠르게 증가
 -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.9%씩 총 1.8배로 증가,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'04년 76.0%에서 '14년 84.0%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
 -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, 연 2.9%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'04년 16.0%에서 '14년 13.2%로 감소,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림
 - 직접세·순경상이전(차감계정)은 연 7.7%씩 급증해 총 2.1배로 증가, 가계소득 비중도 '04년 -8.6%에서 -11.2%로 확대, 가계소득 증가율을 낮춤
- [원인]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은 낮은 수익성, 자영업자 수 감소 때문, 경상세·순수취경상이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급증, 정부지출 증가에서 기인, 피용자 보수 빠른 상승은 임금근로자 고용 증가, 견조한 임금증가율에 힘입은 결과
 - 자영업자,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67.4%, 서비스업 자영업 사업체 중 연간수익 2천만원 미달 저수익 사업체가 약 98만개로 수익성이 낮고, 자영업자 비중은 27.4%로 선진국(11.6%)의 2.4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
 -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'14년 GDP 대비 10.4%로 OECD 평균 21.6%의 절반 수준이나, 10년간 4.4%p(1.7배) 느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고,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'04년 112.0조원에서 '14년 224.0조원(한은)으로 확대되며 급증
 - '04년~'14년 법인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,489만 명에서 1,874만명으로 연 2.3%씩, 총 1.3배로 증가, 임금수준도 '06년~'14년 연 3.8%씩 증가,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느는 경향

● ● ● 요약 ● ● ●

- [과제]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자영업자, 수익성은 낮는데 자영업자 종사자가 많아,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현재의 26.8%('14)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
 - 1인당 GDP 4만불 달성국가처럼 고소득으로 나아가려면 의료, 금융, 정보서비스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
 - 세출구조 효율화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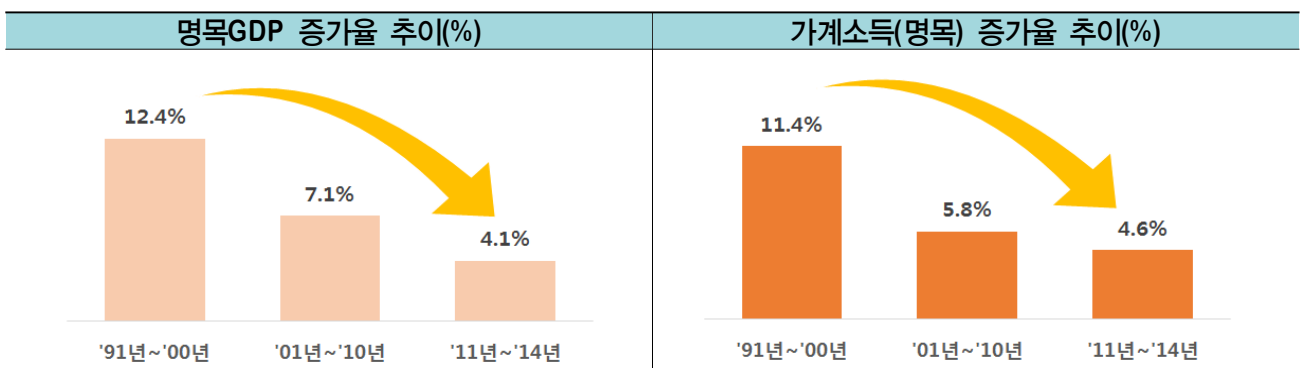
I. 검토배경

-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
 - 가계부채, '13.4분기 1천조원 돌파 후 증가세 지속, '15.2분기 1,130.5조원 기록
 - 민간소비 증가율,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연 4~5%대에서 최근 연 1%대로 둔화



출처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실질)

- 가계소득 증가율, '11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4%대로 둔화
 - GDP성장률의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율 하락 및 가계부채 증대로 연결*
 - * “경제성장률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피용자보수 등을 통해 가계부분으로 유입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”, “경상소득 1% 하락 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0.14만큼 상승”
(출처 : 임진 한국금융연구원, 2013.4, “저성장의 거시경제적효과”)
 - '90년대 명목GDP, 가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.4%, 11.4%로 두 자리대로 성장, '00년대에는 연 7.1%, 5.8%로 하락, '11년부터 연평균 명목GDP 증가율 4.1%의 낮은 수준이 이어짐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율도 연 4.6%로 한 층 둔화
 - GDP성장률과 가계소득, 가계부채 간 연관성을 일반국민이 체감, 공감하기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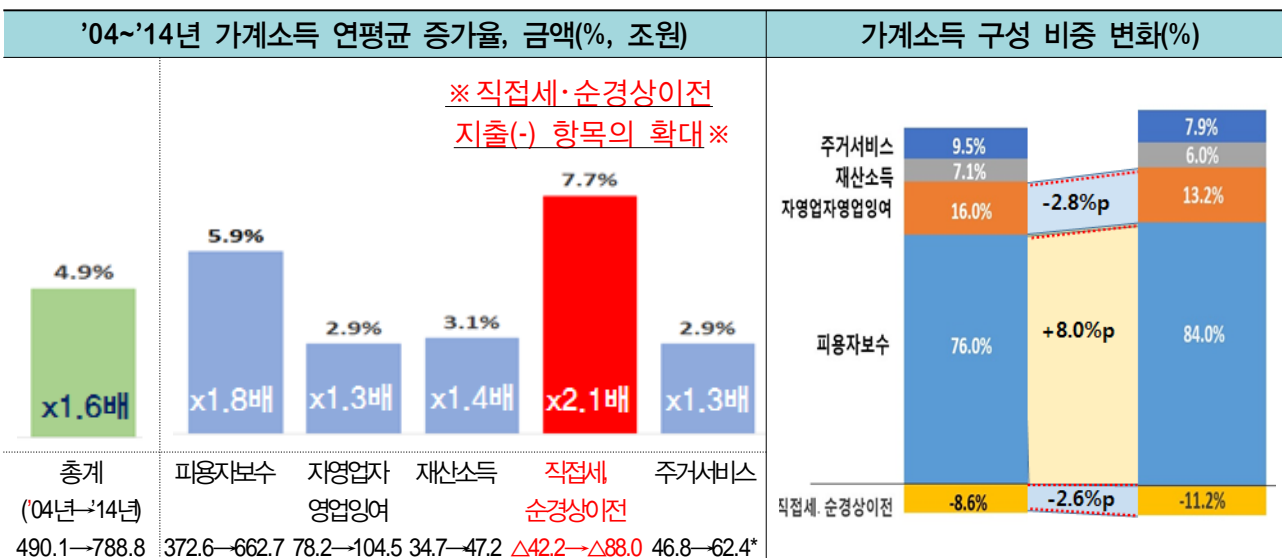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한국은행 국민계정, 연간 증가율의 평균

- 본 보고서는 가계소득에 초점을 맞춰 증감 원인을 파악하고 가계소득 구성 주요 항목별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II. 최근 가계소득 변동 추이('04년~'14년)

- '04년~'14년 가계소득은 연 4.9%씩 증가, 항목 중 피용자보수가 빠르게 증가
 - 가계소득*을 소득 원천에 따라 ①피용자보수, ②자영업자소득, ③재산소득, ④직접세 및 순수취 경상이전, ⑤주거서비스소득으로 분류
 - * 본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소득 자료를 이용, 가계소득 항목별 분류는 경제전망보고서(2015.4월, 한국은행) 방식을 따름
 - 총가계소득, '04년 490.2조원에서 '14년 788.8조원으로 연 4.9%씩 증가, 1.6배로 증대
 - 항목별로 동기간 피용자보수가 연 5.9%씩 '04년 대비 총 1.8배로 늘어 총가계소득보다 빨리 증가,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연 2.9%씩으로 낮아 1.3배에 그쳤고, 직접세·순경상이전지출은 연 7.7%로 빠르게 확대되어 총 2.1배로 증가
 - ※ '주거서비스=자가소유 귀속임대료+전월세 임대료'로 의미해석이 불명확해 제외해 검토
- 동기간 가계소득 항목별 비중은 피용자보수만 8.0%p 증가, 자영업자 영업잉여 2.8%p 감소, 직접세·순경상이전지출 2.5%p 확대 등 나머지 항목은 감소
 - 피용자보수는 명목GDP(연5.3%)보다도 빠르게 늘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'04년 76.0%에서 '14년 84.0%로 약 8.0%p 증가,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
 -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.9%로 천천히 늘면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04년 16.0%에서 '14년 13.2%로 2.7%p 감소,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
 - 직접세 및 순경상이전 지출(마이너스 계정)은 지난 10년간 연 7.7%씩 늘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'04년 -8.6%에서 -11.2%로 약 1.3배 수준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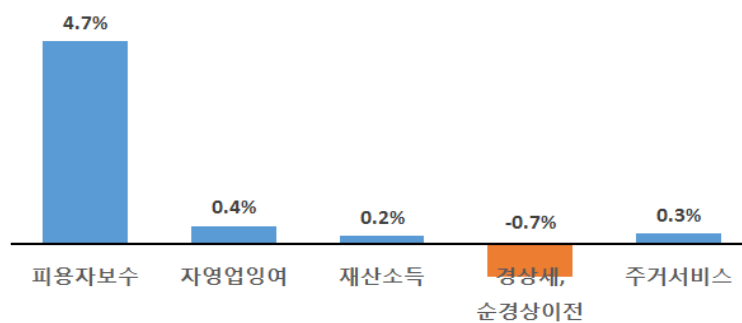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/ 그래프 안에 x배수 의미 : 해당 항목 10년간 몇 배로 늘었는지 수치, ※ 주거서비스 '14년 수치 부재,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'13년과 동일(7.9%)하다고 가정하여 산출

- '04~'14년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4.9%에 대한 가계소득 항목별 기여도는
 - 피용자보수 4.7%p로 절대적, 자영업잉여 0.4%p로 미미, 경상세 등은 $\Delta 0.7\%p$
 - 피용자보수는 '04년 가계소득 대비 비중이 76.0%로 높았는데 연 증가율도 5.9%로 가장 빨랐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율에 대한 기여가 4.7%p로 절대적으로 큼
 - 자영업자영업잉여는 '04년 가계소득 대비 비중이 16.0%였는데 연 증가율이 느려 지난 10년간 기여가 0.4%p에 그쳤고, 경상세·순경상이전은 '04년 비중이 $\Delta 8.6\%$ 로 높지 않으나 연 7.7%씩 빠르게 확대되어 소득증가 속도를 0.7%p 낮추는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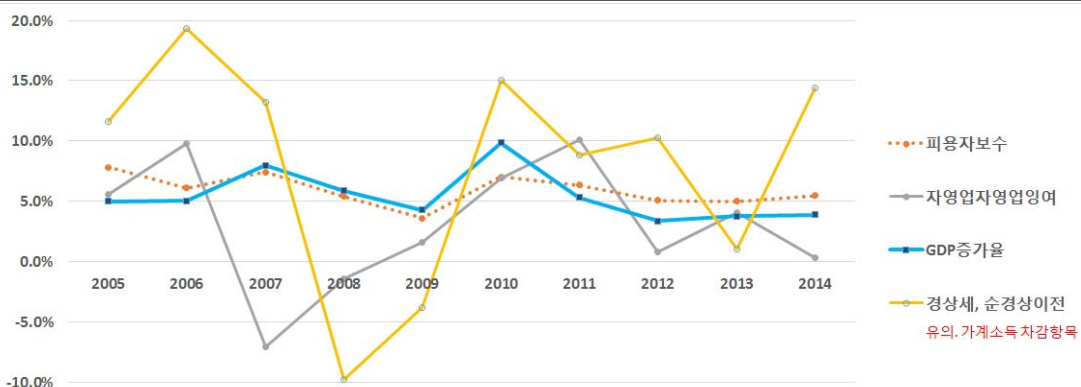
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4.9%에 대한 항목별 기여도(%p)

$4.9\% = 4.7\%p + 0.4\%p + 0.2\%p + \Delta 0.7\%p + 0.3\%p$



- GDP와 피용자보수, 경상세 등은 증감률 방향성 비슷, 자영업잉여는 불명확
 - '04~'14년 GDP증가율(명목)과 피용자보수 증가율간에 변동폭과 추세가 비슷해, 피용자보수가 전체적인 경기흐름, 경제활동 활력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며, 경상세·순경상이전은 GDP증가율과 증감 방향성은 같으나 진폭이 큰 경향
 - *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피용자보수 등을 통해 가계 유입(임진, 2013.4)
 - 자영업잉여 증가율*은 GDP증가율에 직접 영향받기 보다 타요인 영향이 커 보임
 - * 자영업자 수익성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편, 자영업자수는 실업률과 정(+)의 관계(전병유, 노동研, '03)로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 상승과 함께 자영업자수 증가

'04~'14년 가계소득 주요항목별 증가율 및 GDP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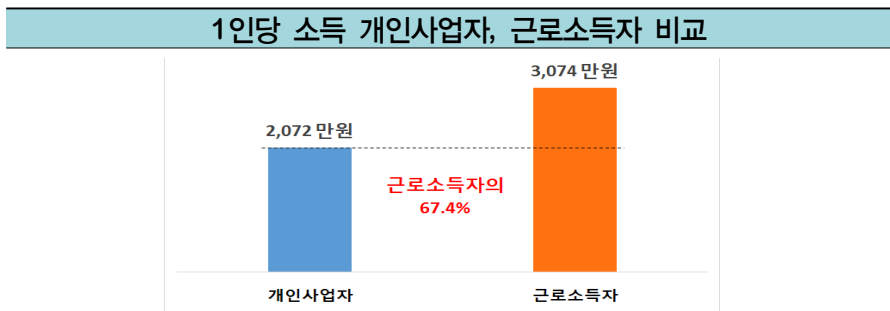


Ⅲ. 가계소득 변동 원인에 대한 항목별 검토

< 1 >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(연2.9%) : ①낮은 수익성, ②자영업자 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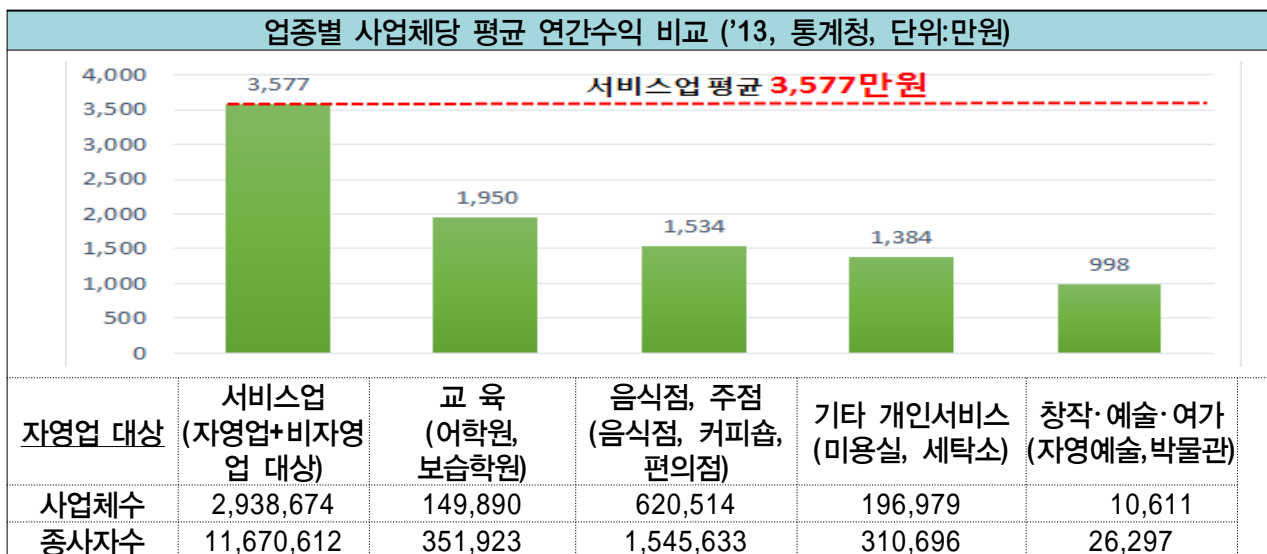
□ 자영업자,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67.4%로 낮고, 서비스업 자영업 사업체 중 연간수익 2천만원 미달 저수익 사업체가 약 98만개로 수익성이 낮고, 자영업자 창업이 경쟁강도가 높은 생계·기능형 창업 중심

○ '13년 기준, 1인당 연간 근로소득은 3,074만원, 개인사업자 1인당 연간소득은 2,072만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자 대비 67.4%에 불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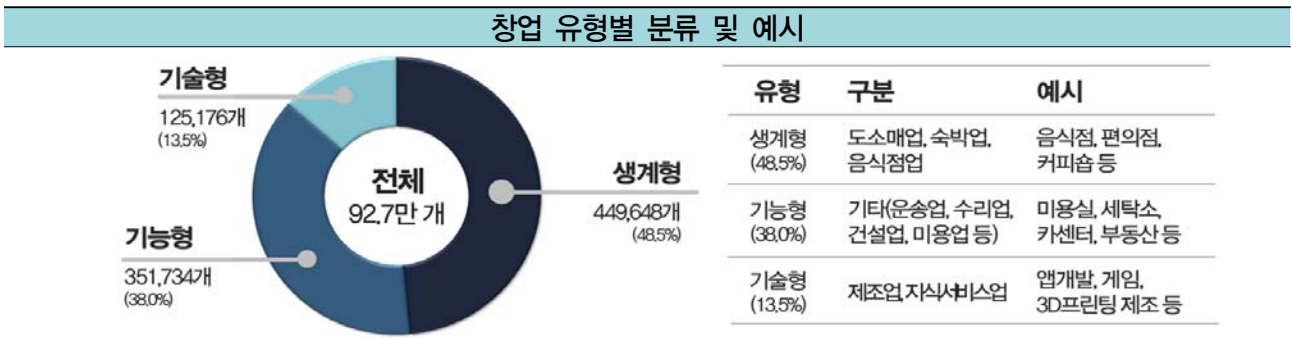
출처 : 국세청 국세통계연보

-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사업체 298만개 중 1/3에 달하는 약 98만개(223만 명)가 사업체당 평균 연간수익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4대 저수익 업종에 분포
- 4개 업종은 ①교육서비스업, ②음식점·주점업, ③기타 개인서비스업(미용·욕탕·세탁·장례식장 등), ④창작·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·공연단체·박물관 등)
- 위 4개 업종의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,569만원에 불과, 이는 전체 서비스업 (25개 업종) 평균 사업체당 영업이익 3,577만원의 43.8%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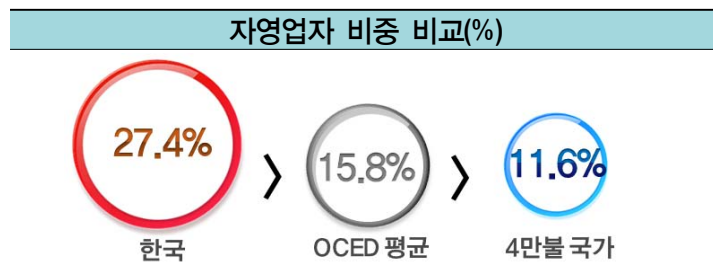
출처 :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/ 사업체당 연간수익 = (매출액-영업잉여)/사업체수
 자영업 기준 :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의 기준(종업원수 10인 미만이고 매출액 1.5억원 이하인 사업체)에 따라 재산출

-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('15.10)에 따르면 경제주체별 전년 대비 체감소득에 대해 자영업자가 2.8%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다고 답변
 - * 지위별 체감소득 : 전체△0.1% 정규직0.8% 비정규직0.1% 기타△1.2% 자영업자△2.8%
- '13년 약 92.7만명 창업사업자 중 48.5%는 음식점·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, 카센터·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 38.0%, 앱·게임 등 기술형 창업 13.5%인데, 생계형·기능형 창업은 경제규모 대비 사업자수가 많아*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
 - * (카센터) 차량 1,000대당 카센터수 韓 1.66개('14), 美 0.99개('12), 獨 0.82개('10)
(미용실) 인구 1,000명당 미용실수 韓 2.0개(총8.6만개), 美 0.3개(총10.2만개)



출처 : 전경련 '창업 오아시스를 만드는 힘, 규제개혁('15.10.25) 재인용
 주: 생계형·기술형 기준(중소기업청), 기능형 기준(생계형·기술형 제외한 나머지로 임의 분류)

- 자영업자수는 최근 10년간 79만명 줄었으나, 우리나라 총고용 중 자영업자 비중은 27.4%로 선진국(11.6%)의 2.4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음
- 자영업자수가 '04년 766.3만명에서 '14년 687.2만명으로 79.1만명 감소(총인원수 10.3% 감소, 연 0.8%씩 감소)하여 자영업자 영업잉여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동
-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'13년 27.4%,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*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(11.6%)의 2.4배 수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음
 - * 1인당 GDP 4만불 달성국가의 경제구조, 성장경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풍요 확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보아 벤치마크로 선정, 비교
-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그리스(36.9%), 터키(35.9%), 멕시코(33.0%)에 이어 4번째로 높고 OECD 평균(15.8%) 보다도 1.7배 높음



1인당 GDP 4만불 달성국가 포함된 국가리스트 : 호주, 미국, 노르웨이, 캐나다, 덴마크, 스웨덴, 독일, 일본, 아이슬란드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벨기에, 네덜란드 등 13개국(OECD통계로 비OECD국가 수치 부재) 출처 : OECD

< 2 > 경상세·순수취경상이전 부담 증가(연7.7%) : ①사회보장지출 급증, ②정부지출 증가

□ 지난 10년간 사회부담금, 경상세의 빠른 확대로 가계소득보다 1.5배 빨리 확대

○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은 가입자수·보험료율 상승 등으로 연 9.5%씩 증가

* 국민연금 가입자수(만명) : '02년 1,649.9 → '08년 1,833.5 → '14년 2,112.5

* 보험료율(%) : (국민연금) '98~現 9% 유지 (건강보험) '04년 4.2% → '09년 5.1% → '14년 6.0%

-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은 '14년 기준 GDP 대비 10.4%로 OECD 평균인 21.6%보다 절반에 못 미치지만, 지난 10년간 4.4%p(1.7배)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빠름

* 사회보장지출/GDP(%) : 韓 6.0('04)→9.0('10)→10.4('14), OECD 19.5('04)→21.7('10)→21.6('14)

직접세 및 순경상이전 항목별 추이(금액, 조원)			
	2004	2014	연평균 증가율
총계	-42.1	-88.0	7.7%
소득, 부 등에 경상세	-30.5	-67.0	8.2%
사회부담금	-73.3	-182.0	9.5%
사회수혜금	61.7	161.0	10.1%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소득, 부 등에 대한 경상세(마이너스계정) : 소득세 및 주민세, 자동차세 등

사회부담금(마이너스계정)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관련 기업, 및 가계가 부담한 금액

사회수혜금(플러스계정) :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 수취금 및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퇴직연금, 가족수당, 육아휴직수당, 기초연금 등 각종 보험금, 연금, 수당 수취금, 기타경상이전

○ 소득·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정부지출이 '04년 112.0조원에서 '14년 224.0조원(통계: 한국은행)으로 연 7.2%의 속도로 확대면서 이와 비슷한 속도로 확대

- 소득세율은 '04~'14년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나 소득세부담이 늘어난 것은, 소득증가율보다 느린 과표조정, 세원 양성화, 공제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

* 소득세율 : '96년 10%(1천만원 이하)~40%(8천만원 초과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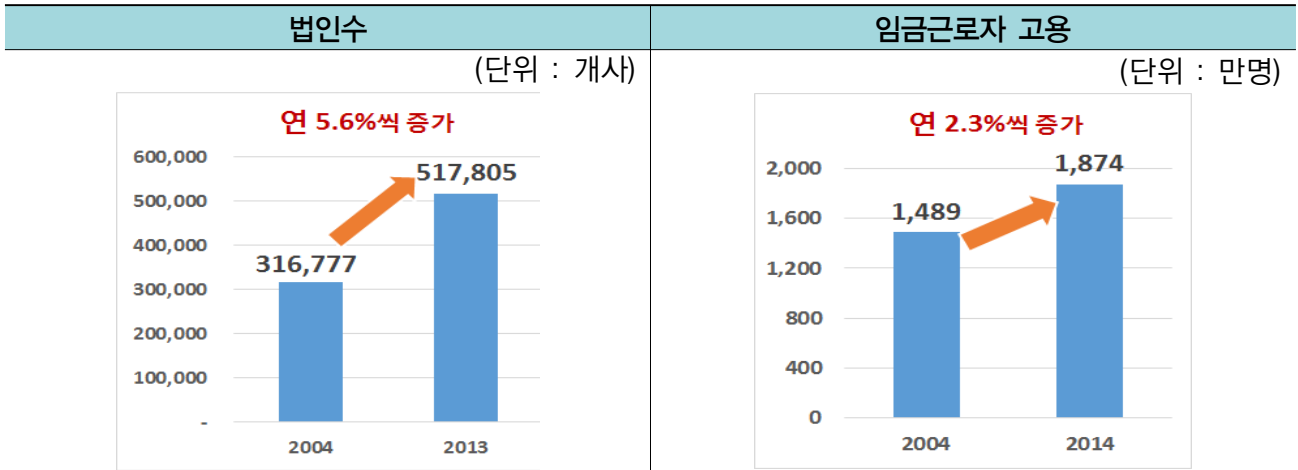
'08년 8%(1,200만원 이하)~35%(8,800만원 초과),

'14년 6%(1,200만원 이하)~35%(8,800만원 초과~1.5억원 이하), 38%(1.5억원 초과)

○ '04~'14년 사회수혜금(+계정)이 빠르게 확대되었는데,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금고갈 전망을 감안 시, 결국 사회보험금(-계정)의 보험료율을 올려 사회부담금이 더 늘거나, 수혜금이 축소되어 수혜금증가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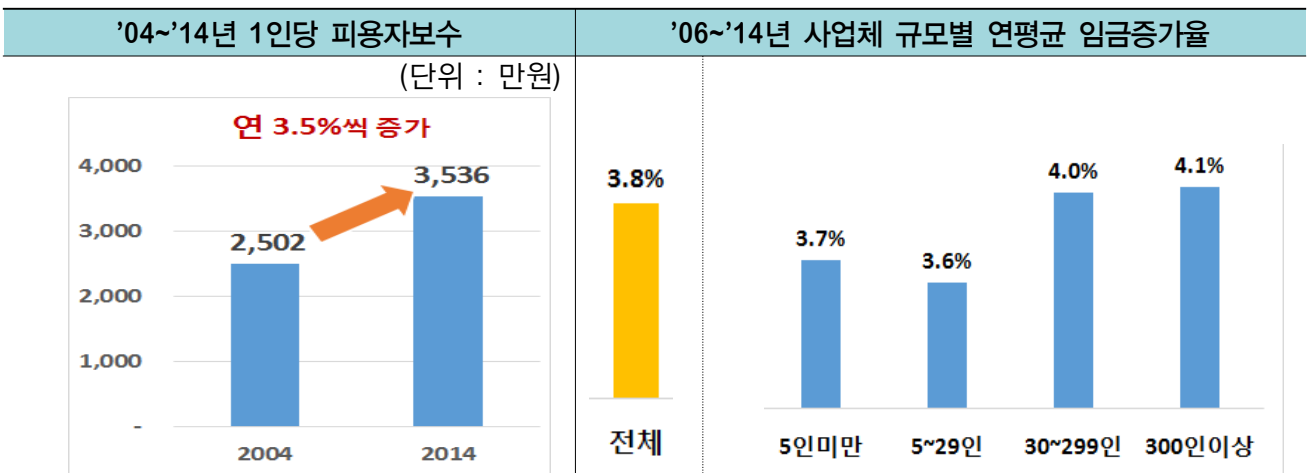
< 3 > **비용자보수 빠른 상승(연5.9%) : ①임금근로자 고용 증가, ②견조한 임금증가율**

- 지난 10년간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인원이 연 2.3%씩 확대
 - '04~'14년 법인수가 31.6만개에서 51.7만개로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고용도 1,489만명에서 1,874만명으로 연평균 2.3%씩 꾸준히 증가



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, 국세청

-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1인당 보수도 연 3.5%씩 꾸준히 상승,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증가율이 더 높은 경향
 - '04~'14년 1인당 비용자보수는 2,502만원에서 3,536만원으로 연 3.5%씩 증가
 - '06~'14년 사업체 규모별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 4.1%로 가장 높고 30~299인 사업체에서 연 4.0%로, 전체 평균증가율인 연 3.8%보다 높아 규모가 클수록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높은 추세가 관찰



출처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임금근로자수), 한국은행(비용자보수), 고용노동부(임금증가율, 사업체 규모별 월급여액 이용해 산출 '04, '05년 수치 부재)
 1인당비용자보수 = 비용자보수총액 / 임금근로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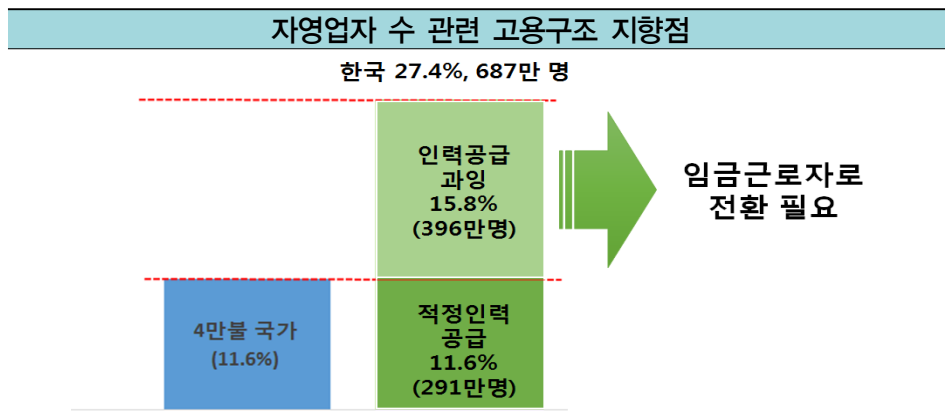
IV. 가계소득 개선 방향

- 자영업자, 수익성은 낮는데 자영업자 종사자가 많아,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현재의 27.4%(’13)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
- ’04~’14년 임금근로자 비중이 66.0%에서 73.2%로 늘고 자영업자 비중이 34.0%에서 26.8%로 줄어 고용구조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변했으나, 자영업의 저수익성을 감안 시 향후 임금근로자 일자리 추가 창출로 고용구조가 더 바뀔 필요

	'04	'07	'11	'13	'14
고용률 (A+B)	59.8%	59.8%	59.1%	59.5%	60.2%
임금근로자/15세이상인구 (A)	39.5%	40.8%	42.4%	43.2%	44.1%
자영업자/15세이상인구 (B)	20.3%	19.1%	16.7%	16.3%	16.1%
총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	66.0%	68.2%	71.8%	72.6%	73.2%
자영업자 비중	34.0%	31.8%	28.2%	27.4%	26.8%

고용률 = 취업자 (임금근로자+자영업자) / 15세 이상 인구 cf. OECD 기준 15~64세 인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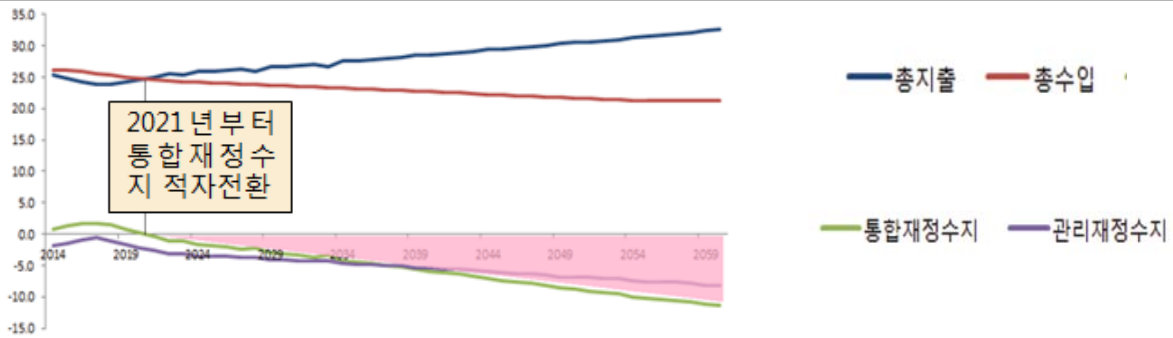
- 3장에서 살펴본 연간 사업소득 2,000만원 이하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 종사자 223만명 중 절반 정도는 장기적으로 신산업 발전을 통한 임금 근로자 일자리 신규 창출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필요



출처 : OECD(자영업비율, '13년),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자영업 종사자수, '13년)

- 자영업자 창업 업종, 음식점·주점, 미용·세탁소 등 저수익성 또는 경쟁강도가 높은 업종 중심에서 자동차개조산업, 산지·강 비즈니스 등 신산업으로 다양화 필요
- 경상세·순경상이전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 중이며 동 상황이 심화될 우려가 커, 세출구조 효율화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
- 현행제도 유지 시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 적자 전환 후 적자규모가 매년 확대될 전망,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증세 단행 시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 내릴 것으로 예상

(정부재정) 총수입·총지출·재정수지 전망 (단위: GDP 대비 %)



출처: 국회예산정책처

주: 관리재정수지=통합재정수지-사회보장성기금수지(국민연금,교직원연금,고용보험기금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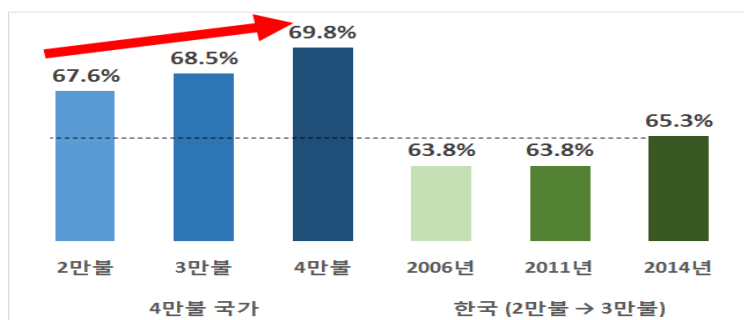
통합재정수지=수입-지출·순융자

□ 피용자보수, 고소득 국가 대비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,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총 고용률 향상을 도모할 필요

- 고소득 국가인 1인당 GDP 4만불 달성국의 성장단계별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, 2만불 달성시점 67.6%, 3만불, 4만불 달성시점 각각 68.5%, 69.8%로, 1인당 GDP 성장과 고용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
-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만불 달성시점인 '06년 63.8%로 4만불 달성국의 2만불 시점의 고용률 67.6% 대비 3.8%p 낮은데, 최근 3년 사이 개선되어 '14년 65.3%를 기록했지만 선진국의 3만불 달성시점 고용률과의 격차가 아직 3.2%p에 달함

* 한국의 1인당 GDP \$ 27,964('14년). 고소득 국가와의 성장단계별 비교 편의상 선진국의 3만불 달성시점과 우리나라의 '14년 수치(2만8천불)를 비교

4만불 국가와 한국, 시기별 고용률 비교



4만불 국가 : 호주, 미국, 노르웨이, 캐나다, 덴마크, 스웨덴, 독일, 일본, 핀란드, 벨기에, 네덜란드, 아일랜드, 프랑스, 룩셈부르크 14개국

출처 : OECD, 고용률 OECD방식(15-64세 인구 대상)

- 고용률을 고소득국가처럼 향상시키려면 의료, 금융, 통신·사업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정체 등 성장정체를 해소할 필요

* 지식집약서비스업(OECD) : 헬스케어, 금융, 통신·사업서비스(소프트웨어·R&D 등) 등

- 고임금인 4대 지식집약 서비스업종의 고용 비중은 '06~'08년에 11.8%에서 13.4%로 증가했으나, 그 후로 최근까지 고용 비중이 0.2%p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더뎠다

전산업 고용 대비 업종별 고용 비중					임금수준(₩, 월)
	2006	2008	2010	2013	
①~④ 총계	11.8%	13.4%	13.5%	13.6%	₩ 4,293,110
①보건, 의료	3.4%	3.7%	3.9%	4.1%	3,320,074
②금융, 보험업	4.0%	4.1%	4.0%	3.7%	5,232,805
③방송통신, 정보서비스업	1.3%	1.3%	1.4%	1.3%	4,493,353
④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	3.0%	4.2%	4.3%	4.5%	4,126,207

출처 :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('06~'13, 취업자수), 고용노동부('14, 임금)

①~④ 포괄업종 : ① 보건업, ② 금융업, 보험·연금업, 금융·보험관련서비스업, ③ 방송업, 통신업,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관리업, 정보서비스업, ④ 연구개발업, 전문서비스업, 건축기술·엔지니어링·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, 기타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

①~④ 업종별 임금수준은 각 세부업종별 임금수준의 단순평균,

①~④ 임금수준 평균은 ①~④의 단순평균 ※ 세부업종의 단순평균 값은 ₩ 4,493,353

-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보건·의료 4.1%로 선진국의 절반수준(48%), 금융·보험 5.6%, 정보통신업 3.9%, 전문과학기술 5.1%도 선진국의 70~80% 수준에 불과
- 금융보험, 정보통신업은 '06~'13년 부가가치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성장정체 현상이 관찰, 보건·의료(3.5→4.1%), 전문과학기술서비스(4.3→5.1%)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꾸준히 늘었지만 선진국 대비 각각 0.48, 0.78 수준으로 아직 부진

<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, 소득 4만불 달성국가 - 한국 비교 >

업종	4만불국가*(a)	한국		(b)/(a)
		2006	2013(b)	
전체 서비스업	73.5%	60.2%	59.3%	0.81
①보건, 의료	8.4%	3.5%	4.1%	0.48
②금융, 보험업	7.9%	6.4%	5.6%	0.71
③방송통신, 정보서비스업	5.2%	4.7%	3.9%	0.75
④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	6.6%	4.3%	5.1%	0.78

* 4만불 달성국가, 업종별 시계열 자료 부족으로 최근연도('12~'14중 각국 최신연도) 비중

-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상승을 주도한 피용자보수는 향후 고용률이 고소득 국가의 성장기처럼 높아질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 대해 추가 기여가 가능할 것

V. 시사점

□ 가계소득 증가율 현황 및 변동 원인 점검

- 최근 가계소득 증가율이 4%대인데, 이는 최근 낮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경제 생산활동이 둔화된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춤한 것으로 보임
-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동인을 살펴보면, 임금근로자 및 임금의 견조한 증가로 피용자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을 지지하는 역할
- 자영업의 낮은 수익성 및 자영업자 수 감소에 따른 자영업잉여 증가율 부진, 가계소득의 차감항목인 경상세·순경상이전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

□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

- 자영업자,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고 자영업자수가 높아, 자영업자 창업이 음식·주점, 미용세탁 등 저수익 중심에서 자동차개조산업, 산지·강 비즈니스 등 신산업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 구조로 유도
- 경상세·순경상이전, 세출구조 합리화 및 효율화 등으로 증가 속도 완화
- 피용자보수, 고소득 국가처럼 의료, 금융, 정보서비스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을 활성화 해 고소득 임금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, 임금근로자 비중 등 제고

[참고] 가계소득 항목 구성 및 정의

- 가계소득*을 소득 원천에 따라 ① 피용자보수, ② 자영업자소득, ③ 재산소득, ④ 직접세 및 순수취 경상이전, ⑤ 주거서비스소득로 분류

* 본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소득 자료를 이용, 가계소득 항목별 분류는 경제전망보고서(2015.4월, 한국은행) 방식을 따름

-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, 고용주 사회부담금의 합계
- 자영업자소득은 가계 영업잉여, 가계 소유 준법인기업 순사업소득의 합계로 정의
 - 가계 영업잉여*는 국세청에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
 - * 본 보고서에서 가계 영업잉여로 주거서비스소득을 제외한 수치 사용
 - 가계 소유 준법인기업의 순사업소득 :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일정 규모를 넘는 비법인사업자 중 가계소유 비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
- 재산소득은 이자, 배당, 투자소득지급, 임료 등의 합계
- 직접세 및 순경상이전은 직접세(소득세, 주민세·자동차세 등 기타경상세)와 순경상이전(국민연금, 고용보험,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 등)의 합계
- 주거서비스소득은 개념상은 '자가소유 귀속임대료, 전·월세임대료 수입 등'이지만, 동 통계 미공개로 '부동산 및 임대업소득' 수치로 같음